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 대중화 · 특성화 · 세계화 중점 추진할 것”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이 5월초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장관보다 일찍 취임한 ‘죄’로 100일 행사도 없이 조 출하게 넘어갔다는 박 차관. 그는 행시 출신으로 일찌감치 과기부에 입성한 인물이다. 당시만 해도 잘나가는 고 시 출신들이 재경부 등 힘있는 부서를 택할 때 그는 과학이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과기부를 택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동기를 중에 상당히 일찍 차관이 된 성공한 관료에 속한다. 박 차관을 만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2기로 접어든 시점에 차관이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 대담 | 이은정 _ 본지 편집위원(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 대담일시 | 2006년 5월 9일

☉ 차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과학기술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 4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현재까지 진행 되어 온 주요 정책들이 가시적인 열매를 거두고 잘 마무리될 수 있 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차관에 임명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합 리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이끌어 가는 제1주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계 모두가 합심하여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 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황우석 박사의 즐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발 표 후 직접 과기부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 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당시 대책 발표라기보다는 사과 발표라고 해야겠죠. 정부는 논문조작 사건 자체보다는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와 연구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BT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데에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는 성과로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논문조작 사태와 그 파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그것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겠죠.

❶ 과학기술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연구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논문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연구윤리 정립을 위한 노력은 우선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과학기술계 연구 활동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 정립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이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자체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6월 중 제시할 계획이며 특히 출연연구기관과 최근 3년간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은 27개 대학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 하반기 내에 자체검증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❷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해 국제과학계에서 실추된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로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소 손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즐기세포 논문조작 문제가 국내에서 제기되어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되었다는 점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윤리 관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파견중인 과학관을 통해 우리 입장을 홍보하였으며, 지난 2월 열린 OECD 거대과학포럼, 지난 3월 시드니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도 과학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정책을 적극 설명한 바 있습니다.

❸ 2004년에 출범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이제 제2기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2004년 10월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처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제1기 체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관계 부처간에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혁신국가 이미지를 확립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제 제2기 체제에서는 제1기 체제가 일군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제를 토대로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착실히 기여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❹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제2기 부총리체제는 과학기술의 대중화, 생활화, 특성화, 효율화, 세계화에 정책방향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제성 있는 R&D운동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같은 맥락에서 미래 유망기술의 특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우수한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❺ 과학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 계획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월 14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하며 12월말까지 기초체력 측정, 임무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우주 적성검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약 1개월간은 최종 후보자 2명이 러시아 가가린우주센터에서 교육과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일본 출장 때 서점에서 우주여행을 테마로 한 여행 가이드북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❻ 단 2명의 우주인 선발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최종 선발되는 2명뿐 아니라 각각 선발단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체험, 항공비행 등 가벼운 프로그램은 최종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인 배출은 단순한 과학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주인의 선발, 훈련 및 우주 비행을 통해 유인우주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학, 생명, 정보기술 분야 등 우주공간에서 수행하는 과학실험은 지상에서 불가능한 무중력 실험을 수행하여 우리 기술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전남 고흥에 지어질 우주센터에 대해서도 준비사항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고흥우주센터는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한반도 땅에서 발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150만 평 규모로 건설중인 우주센터는 현재 70%에 달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 계획으로는 2007년 11월에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위성 2호'를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발사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발사체 기술과 우주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공계 출신 CEO가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대학진학 등에서 이공계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가 되었고, 일부에서는 숫자도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입니까.

우리 사회는 현재 다원화된 사회 구조로 가는 전환기적 시점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계속 그 분야로 진출해 전문가로 발전하는 사회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른바 '융합'의 시대가 된 거죠. 인문사회계 출신도 이공계로 진출하고, 이공계 출신도 인문사회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학업의 퓨전화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원화된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이공계에 우수 인력이 모이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 발전에 문제가 있을텐데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공계 문제는 전체적으로 양적인 공급은 충분하지만 이공계로

진학하려는 우수 학생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첨단·핵심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고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2001년에는 80.7%였으나 점차 줄어서 74~75%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이공계 출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과기부에서는 취학 전 단계(과학신통 프로그램 기획) → 초·중학교 단계(과학영재 교육원) → 고등학교 단계(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 대학단계(대통령 과학장학생, 이공계 국가장학생)까지 이어지는 전(全)주기적인 인재양성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2004년에 마련되었던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에는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는 빠져있었어요. 2005년도에는 이를 포함시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해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과학기술계 비정규직에 대한 시안을 도출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정부 전체의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인 조율, 추가, 보완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 정년퇴직 과학자 등 과학계의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각도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요.

노령화와 경기침체, 신진연구자의 공급·영입으로 인해 퇴직 과학기술인력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지원 시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로과학기술자문봉사단, 산업기술지원단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특정과제 자문위원의 실적급 형태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거나, 현직 교수 위주의 1회성 또는 단기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인력의 능력을 퇴직 후에도 사장시키지 않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초기에는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퇴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기업(연) 퇴직연구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1인당 월 2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매년 100명 정도를 지원하고, 2009년 이후에는 그 규모



박영일 과기부 차관이 지난 5월 9일 경기 과천에서 본지 편집위원인 이은정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를 1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경영학도 출신으로 과기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기부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지난 1984년 6월 1일 과기부 재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22년간 과기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는 경영학, 석사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이후에 KAIST에서 경영과학, 산업경영으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차이점을 특별히 느끼진 않습니다. 당시 지도교수께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시 과기처에서 일해보라고 조언해주셨는데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포스트 IT(POST-IT) 시대의 대표적인 첨단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기술혁신의 주요 패러다임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입니다. 세계는 현재의 기술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융합과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건강진단 기술을 접목한 것은 IT에 BT가 결합된 것이구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영상효과는 IT에 CT(문화기술)가 적용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IT기술 강국입니다. 앞으로 강점 있는 IT기술에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과기부보다 정부부를 선택했다면 지금 훨씬 잘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정통부가 아니라 체신부였죠. 체신부에서는 정보산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1984년부터 과기처 정보산업과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로는 앞섰다고 할 수 있는 정보산업진흥계획, 소프트웨어보호제도 업무 등에 많은 흥미를 느끼며 수행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물론 이후에 정통부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과기부에 있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과기부 조직의 특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기부의 가장 큰 특성은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신기술을 가장 먼저,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업무상의 특성이 조직의 장점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 부처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유행이지만 과기부는 이미 80년대부터 민간인 특채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꾸릴 당시 과기부 내부와 외부 출신을 40대 60의 비율로 구성했는데 마찰이나 잡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과기부에서 많은 차관들을 모셨을텐데요, 직접 차관이 되시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차관이 되기 전에는 장, 차관들이 사전에 정책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차관이 되고 보니 각종 회의와 행사에 밀려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도 주로 업무를 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는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거나, 등산을 하는 등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드라마 이브나 여행을 들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우리 부에서 여행갈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드라이브 코스를 자문 받았죠. ⑤

박영일 차관 주요 이력		
1980. 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1982.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0. 5	청와대 정무장관실	
1984. 2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1984. 6	과기부 정보산업과	
1996. 2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산업경영 전공)	
2002. 2	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	
2002.12	과기부 연구개발국장	
2003. 8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장(1급상당)	
2005. 4	과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 2	과기부 차관	